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 본회의 통과는 ‘난항’

여야, 법제사위서 처벌대상 논의
경영책임자 범위 사업 중심 정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등
구체적 책임범위 조정 현안 이견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중대재해 처벌법) 처리에 합의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생겼을 때 해당 기업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데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결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1000㎡ 미만 사업장 보유 자영업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 대상 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등에 합의했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의 경우 법안에서 사업 중심으로 정비했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와 오퍼 등도 포함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벌금 10억원 이하. 법안

의 경우 벌금 50억원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등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정할 현안은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현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을 차등을 뒀선 안 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에 대해서 “4년 유예 8000명, 5년 유예 1만명의 국민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사업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의무 적용, 도급업체 등에 공동의 무 적용 여부를 두고도 여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원·하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일한 부담이 내려질 경우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합의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챙겨나가자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가위기, 국민·국익 살피는 정치 필요”

박병석 국회의원, 신년 기자간담회
“실사구시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야”
민생대책·국민통합위 구성 등 주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고, 국민은 다함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살피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피야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치로 국민통합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에 정쟁은 멈추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여야 정치권에 ▲국민 안정과 민생을 위한 종합대책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위한 국회 차원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국익 중심의 초당적 의회 외교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선거에 임하면서도, 위기 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장은 국민 안정 및 민생 종합 대책과 관련 “백신, 치료제 도입과 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생존 국민 돕는 긴급 생계 지원, 경제 지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

이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국회 내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시 움직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박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으로서 공개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여야 갈등이 있었지만 국회법 절차,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갖춰졌다.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특히 도덕성 검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주거안정에 26조 등 예산 조기집행 속도

2021 재정 조기집행, 110조 투자계획
예산 63% 215.3조 상반기 조기집행
SOC 예산 14.8조 1분기내 집행하기로

정부가 올해 신도시와 공공주택 등 주거 안정에 26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 반등 모멘텀 확보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재정 조기 집행 및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63%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설정했다. 341조8000억원 가운데 21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등의 재정 집행에 특히 속도를 낸다. 일자리 예산 13조6000억원 중 38.0%인 5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내에 67.0%(9조1000억원)까지 쓸 방침이다.

SOC 예산 46조2000억원 중 14조8000억원(32.0%)은 1분기내에 집행하고 상반기까지 28조6000억원까지 투입키로 했다. 생활 SOC 편성 예산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은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디지털 뉴딜 7조6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고용·사회안전망 5조4000억원 등 총 21조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1월 중 부처별 뉴딜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해 월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11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해 주거 안정과 한국판 뉴딜, 신산업육성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26조4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과 공공주택 건립, 다가구 매입 임대·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작년 15조원에서 올해 1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도로·철도 등 기존 사업과 함께 그린스마트스쿨 등 1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민자사업 진행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김용범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집행 관리, 공공·민자·기업 부문의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금년에도 이러한 경기보장 역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1월부터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760억 규모 농축산물 20% 할인

내수위축 극복, 소비자 부담 완화
28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실시

정부가 설 대목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온·오프라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1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400억원 규모로 시행됐는데, 올해 할인 규모는 760억 원으로 2배 가가

이 커졌고,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공모해 시행된다. 행사기간 중 신선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6차산업 인증제품에 한함)을 구매하는 경우 20% 할인해 준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5만 원어치를 사면 1만 원 할인받아 4만 원에 사는 셈이다. 전통시장에선 30% 할인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3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고용부, 11일까지 누리집서 접수

지난해 11월 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약 6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생계 안정 비용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 수급은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대상자는 6일부터 오는 11월 18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8일과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